

“국책사업 지역업체 밀어줍시다”

경부고속철 주변정비 市가 발주맡아 업체 참여 주문

대구시의회 이틀째 시정질문

대구시의회 이틀째 시정질문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과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재술 행정자치위원장은 28일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총사업비 1조3천107억원) 공사 중 2천400억원이 투입되는 입체교차로 시설발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맡기지 말고 대구시가 수탁 발주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경부고속철 연변 정비수탁자 문회의에서 추가 공사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협약하는 것을 전제로 대구시가 3천500억원 상당의 입체시설, 측면도로, 녹지시설 전부를 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약됐으나 대구시가 측면도로와 녹지 등 1천100억원 공사만 수탁 발주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발주를 철도공단이 하느냐 대구시가 하느냐에 따라 지역업체들의 참여 폭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모처럼 만난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지역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행정부시장은



28일 열린 대구시의회 이틀째 시정질문에서 오전 질의응답이 끝나지 장경훈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을 하겠지만 상대방이 있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시장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치자 이 위원장은 “이 협약의 주도권은 우리 시가 갖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건설업체의 현실을 감안해 수탁발주에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김범일

시장을 답변대에 세워 거듭 의지를 확인했다. 김 시장은 “나중에 지적을 당할 각오를 하고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지만 지하차도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 등 시가 공사를 맡았을 경우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썩 내켜하지 않았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의원도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대형프로젝트에 외지기업들만 참여해 개발 이익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혁신도시건설사업 착공 전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정화기자
moonjh@idaegu.com